

동아시아 3개국 지방정부 대표, 3농 정책 · 경험 · 비전 등 공유 -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 개최 -



▲ 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토론

한·중·일 지방자치단체들이 농업·농촌·농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15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이 9월 14(월)~16(수)일 개최되었다.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 충남연구원이 주최/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FAO 한국협회 등 한·중·일 기관들이 후원한 본 포럼은 한·중·일 지자체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길'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포럼의 핵심 행사인 '지방정부 대표토론 - 동아시아 지방정부 대표로부터 듣는다'와 주제발표, 3농정책 포럼은 이틀째인 15일(화)에 열렸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 아라이 쇼고 나라현지사와 가와가즈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 한쌍하이 중국 옌벤주 상무위원회 부주장 등 한·중·일 지방정부 대표 6명이 무대에 올라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지방정부 대표토론에서는 각 국가 및 지방의 3농 분야 문제점과 정책 사례, 경험, 비전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중, 특히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어느 정부든 농업·농촌·농민이 가장 중요하며, 농업의 경제적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품종 개량이나 먹거리 안전, 친환경 생태 전환, 생태적 가치 보전, 국가 보조금 확대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똑같은 약 처방이라도 그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농업 문제도 정부와 민간, 연구자들이 어떻게 처방하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그 차도가 결정되게 될 것”이라며 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표토론에 이어 아라이 쇼고 나라현지사가 ‘일본 농업 과제와 나라현 농업’, 치우저치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3농정책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3농정책 포럼은 ▲ 지속가능한 농업, ▲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 농민 중심 농정 거버넌스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공통적으로 전문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양병우 회장은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에서 첫째 핵심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농업 경영체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라고 지적하고, 3국 모두 너무 지나치게 부가가치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생산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자원관리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세션을 주재한 좌장인 한국식품유통학회 황수철 회장은 3국의 향후 공통과제 대응 전략 모색에서 키워드는 비슷하며,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 주민 자발적 상향식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3세션 좌장을 맡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동환 회장은 농정이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였지만 현재 지자체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지자체간 차별화되고 독특한 고유의 농정이 개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